

거대자원 및 기반기술 개발과 확산 담당 경직·수동성탈피 새 과기환경 신속 대응



朴炳權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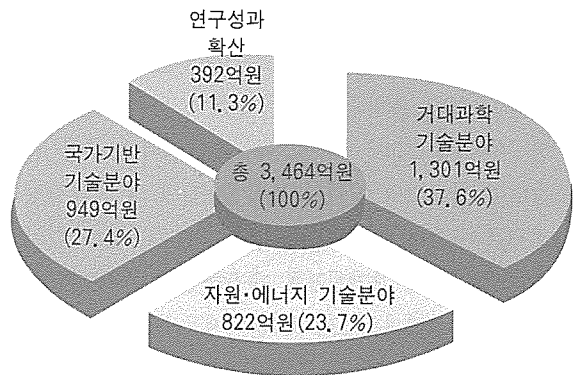
공공기술관련 9개 기관 소속

99년 3월 공공기술연구회는 “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공공기술연구회 정관 2조)”는 목적을 갖고 출범하였으며, 공공기술과 관련된 9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현재 공공기술연구회는 타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자문기구인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 1인과 9인의 사무국 직원이 상근 인력으로 연구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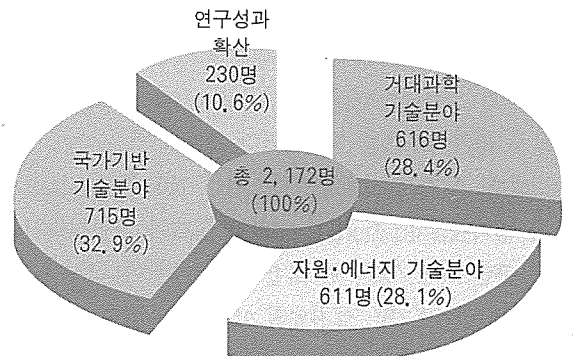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거대과학기술분야(항공우주(연), 해양(연)), 에너지·자원기술분야(에너지기술(연), 자원(연)), 국가기반기술분야(표준(연), 건설기술(연), 철도기술(연)), 그리고 연구성과 확산분야(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99년도 총 예산은 3천4백64억원이며, 총 인력은 2천1백72명으로써 4개 기능별 예산 및 인력현황은 다음의 그래프와 같

〈소관 연구기관 기능별 예산 현황〉



〈소관 연구기관 기능별 인력 현황〉



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회 설립 취지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간 중복된 연구영역을 조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 1년동안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공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발전방향의 정립, 소관 연구기관간 기능의 조정 및 정비 등에 운영목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평가시스템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회 체제 출범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 출연(연)이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였던 경직성과 수동성을 탈피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회는 과거와 같은 출연(연)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연구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엄격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소관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의 기관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둘째, 연구기관간의 상대평가보다는 각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Developing Alternatives)하는 방향으로 평가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셋째, 발전적 기관평가시스템은 계획(Planning)과 평가(Evaluation)가 결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성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기관의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 실시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넷째,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화 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자율이 보장된 가운데서도 각 연구기관이 국가적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한해동안 공공기술연구회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구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체제 내에서의 연구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99년 9월 9일에는 '공공기술연구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립'을 주제로 제1회 공공기술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소관 연구기관들의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논의를 통해 소관 연구기관들의 고유기능을 정립·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술분야 기관고유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정립'을 주제로 제2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두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소관 각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전략적 위치를 설정해야 하며 전략적 위치 설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기관 고유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와 이를 위해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에서는 출연(연)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목표에 따른 연구 수행의 주체로서 그 목표와 역할이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연구개발 영역을 대학 및 기업 등 타 연구수행주체와 차별화된 공공 및 원천기술 연구분야로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여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술연구회는 위와 같은 사업 외에도 이사회를 통해 각 연구기관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8명의

소관 연구기관간 기능 조정·정비

연구기관간 연구영역 및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술연구회는 99년도 한해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99년 3월에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해양공학센터 기능을 한국해양연구소로 이관하였고, 10월에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슈퍼컴센터를 연구개발정보센터로 이관하였다.

또한 현재는 연구회 소관기관으로서 기술정보의 수집, 가공 보급관련 기능을 수행 중인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능조정 및 정비를 위한 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이와 같은 조정작업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관 연구기관들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술연구회는 거시적인 국가 연구개발 체제에서 연구기관들이 담당해야 할 전략적 위치, 연구분야의 특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임기관장을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선출방식에 따라 선임하였다. 지금까지의 기관장 선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 관례를 바꾸어 각계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여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회의 기관장 선임은 민간 전문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를 통해 역량있고 비전이 분명한 인물을 기관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과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회 체제 출범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생산성 극대화'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요소들을 파악, 제거하고, 지난 1년간의 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회 체제의 운영기반을 확립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올해 연구회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연구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부문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

나인 출연(연) 기관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99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각 소관기관들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평가단이 지난 2월 중순부터 현장평가를 통하여 정밀 실사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가 4월 중순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기관평가가 마무리되면 연구회에서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각 연구기관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유사·중복 연구사업, 기관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과제들을 조정하고, 기관의 기본연구 사업방향과 정관을 재검토, 수정하는데 적극 활용코자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차등화 함으로써 출연(연)의 능동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회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술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체제 내에서 연구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타 정부부처, 관련 민간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연구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기능들을 정립하고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과학기술 체제의 거시적인 틀 안에서 연구회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기술연구회는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술정책 방향 및 연구회 형태의 연구기관 육성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연구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소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연구기관간 기능 이관 및 중복기능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99년도 기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관 연구기관간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기관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기본연구사업들의 전문화를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술분야

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들을 소관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굴·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진행해온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능 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과학기술 정보체계라는 큰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올해에도 소관 기관들의 운영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장기 대형 복합기술 연구과제를 기관의 기본연구사업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기본연구사업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술연구회는 1월 말에 발간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

한편 공공기술연구회는 올해부터 자체 정책연구비를 확보하여 기관간 협동연구 및 정책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이라는 공공기술연구회의 정관에 명시된 기능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이렇게 확보된 정책연구비를 통해 크게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연구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국제수준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간 다분야 대형 복합기술 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공공기술분야의 정책대안 및 기획과제를 선정·지원해 나가고자 한다.